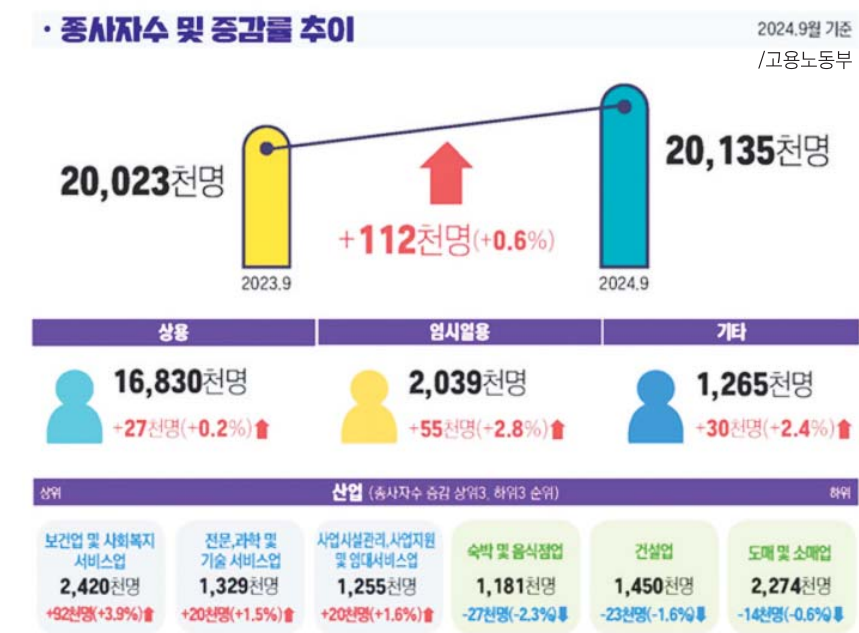


사업체 종사자 11.2만명 늘었지만, 입직·이직률 ‘감소세’

고용부,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입직·이직 줄고, 고용 유동성 둔화
임금 인상에도 실질임금 소폭 증가
입직자 8.5%, 이직자 8.1% 감소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이직자수는 각각 8.5%, 8.1% 감소했다. 명목임금은 3.4% 올랐지만, 실질임금이 1.4% 증가하며 임금 인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9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2002만3000명)대비 0.6%(11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0.2%(2만7000명),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각각 2.8%(5만5000명) 2.5%(3만명) 늘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는 1665만1000명에서 1674만2000명으로 0.5%(9만1000명) 늘었다. 300인 이상은 339



만3000명으로 0.6%(2만1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2000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만명

↑)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19%)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만7000명), 건설업(-2만3000명), 도매 및 소매업(-1만4000명)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체 종사자 중 기타종사자를 제

외한 입직자(91만1000명)와 이직자수(88만80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각 8.5%(8만4000명), 8.1%(7만8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입직률은 5.3%에서 4.8%로 0.5%포인트(p) 하락했으며, 이직률은 0.4%p 하락한 4.7%를 기록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인 8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직자는 78만5000명으로 7만9000명 줄었다. 반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12만명에서 12만2000명으로 1.5%(2000명) 증가했으며, 이직자는 10만 3,000명으로 1.4%인 1000명이 늘었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387만원으로 전년 동월(374만2000원)대비 3.4%(12만8000원)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9000원으로 1.4%(4만6000원) 올랐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권익위 “악성민원 받은 공무원 기관서 적극 보호해야”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A구청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B씨는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B씨와 동료 직원 등 진술에 따르면 B씨가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칼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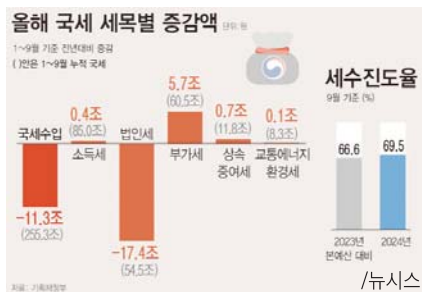
올해 국세수입 11.3조 덜 걷혀… 법인세 17.4조 감소

기재부, ‘9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업실적 하락에 납부실적 감소 영향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에 1조 ↓

올해 1~9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혔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들의 2023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납부 실적이 크게 줄면서



법인세수만 무려 17조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줄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1조 원가량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액이 줄어 3000억 원 빠졌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기조 속 이자소득세와 취

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77.5%) 대비 8.0%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3분기 말까지 70%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9월만 봐도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는데, 부가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9월 부가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4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9월 법인세는 9조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관세는 2000억원 각각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2000억 원 늘었다. 그의 세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지난 8월 중간에 납 신고분을 8~9월 분납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에서 법인세가 납부되고 있다고 봤다. 또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3분기 2.9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 지원 현황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해소한 성과가 올해 3분기 투자금액 기준 2조9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한 실물경제지원팀이 올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입지·인허가 등 각종 투자 애로 9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소된 기업 투자 애로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

화 등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이 방문한 지필로스는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서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으나,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입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추값 안정세에 중국산 추가수입 잠정 보류

농식품부, 농업인과 상생 모색

중국산 배추의 추가 수입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배추 값이 지난 3분기 치솟음에 따라 중국산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가격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며, 국내 생산자들이 외국산에 거부감을 드러냄에 따라 잠정 중단 또는 보류를 결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수입 물량(64톤)을 3개 업체에서 가져간 뒤 현재는 수요가 없다”며 이 같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중국산 배추 수입을 1100톤 규모로 잡았었다. 이후 1차로 16톤, 2차로 48t 들여온 물량이 소진된 이후 수요가 없다는 게 송 장관의 설

명이다.

이어 ‘배추를 수입하면 배춧값 난리난다. 수입하지 말아 달라’라는 농업인들의 최근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가들은 배추의 경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육이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50헥타르(ha)가 줄어도 나머지 면적에서 3kg짜리가 4kg으로 늘어날 정도로 생육이 좋으면 50ha쯤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면담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했다.

배추 도매가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소매가 반영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서 매주 목요일 가격을 반영하는데, 2주 전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김대환 기자